

“국민권익 보호, 신뢰받는 정부”

< 주요정책 추진방향 >

2013. 4. 8.



국민권익위원회
고충처리·부패방지·행정심판

보고 순서

I. 권익위 주요 기능과 역할	1
II.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	2
III. 국정과제 실천계획	5
1.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	5
2. 깨끗한 정부를 위한 「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	7
IV. 주요정책 추진계획	9
1. 현장중심 권익구제 활성화	9
2.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	11
3. 국민신문고 · 110(정부민원콜)을 통한 정책소통	12
4.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실현	14
5.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	16
V. 부처간 협업과제	18
1.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	18
2. 복지지원금 등 예산낭비 관행 개선	19
3.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권익구제	20

I

권익위 주요 기능과 역할

-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·부패방지·행정심판·제도개선 등 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회 행정기관

※ 2008.2.29. 국민고충처리위원회, 국가청렴위원회,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One-Stop 국민권익 구제기구로 출범

고충처리

-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 운영
: 정부민원 접수·처리, 민원분석
- 110 콜센터, 민원상담센터 운영
- 고충민원 조사·처리·시정권고
- 이동신문고, 민원 현장조정
- 민원동향분석 등

부패방지

- 반부패 정책 수립·통합 조정
-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
- 청렴연수원을 통한 청렴교육
- 법령 부패영향평가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
- 부패행위 신고 처리, 신고자 보호
-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, 신고자 보호
- 반부패 민간협력, 국제협력

행정심판

-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,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
- 행정심판 제도연구·개선 및 총괄·조정
-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

제도개선

- 공공분야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
-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
- 제도개선 이행관리

II

정책여건 및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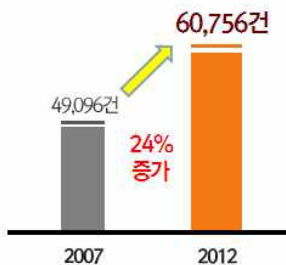
1

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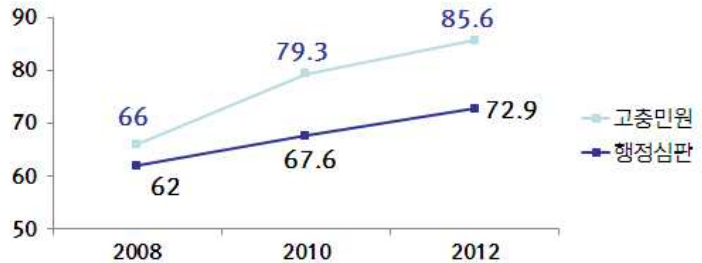
□ 권리의식의 신장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로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권익위에 대한 민원신청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전망

○ 개별 민원 만족도는 증가되고 있으나,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, 행정 편의적 민원처리로는 폭증하는 권익구제 수요 부응에 한계

권익구제 요구건수
(고충민원 + 부패신고 + 행정심판)



만족도 향상
(고충민원, 행정심판)



정책방향

- 부당, 불편, 불만 행정에 대한 국민중심 After-Service 체계 확충
- 정책 단계별 민원동향 분석, 정책개선을 위한 국민불편에 선제적 대응

□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내 협업체계 미흡 및 정책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한계

○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규모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, 주요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국민소통 활성화 필요

※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('09년 삼성경제연구소)

정책방향

-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갈등 예방과 조정역할 강화
- 전자공공토론을 활성화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토론장으로 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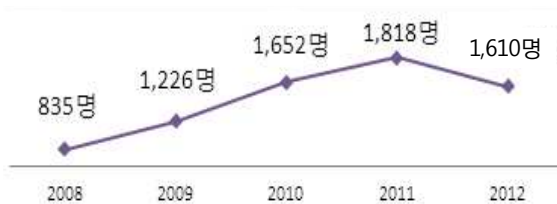
□ 다각적인 노력에도 부패근절에 한계 및 국가 청렴도 정체

- 청렴문화 미정착, 공직윤리 미흡, 처벌 규정 등 미비로 음성적 알선·청탁 등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

※ 부패원인('12년 조사) : 부패유발 문화(34%), 공직윤리 부족(26%), 불합리한 제도(20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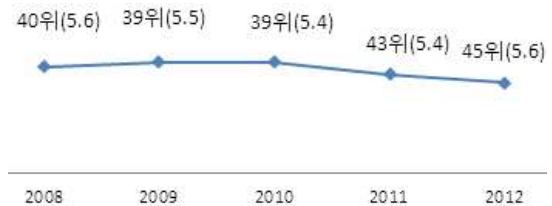
- 부패 공직자 수와 국제 평가기관의 국가 청렴지수는 계속 정체 되고 있는 수준

부패 공직자 처벌 현황*



*기관별 부패공직자 통계(중앙부처·지자체·공기업)

한국의 부패인식지수(CPI) 순위*



*국제투명성기구(TI)자료

정책방향

- 알선·청탁 관행 개선, 공직윤리 체계 확립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 시켜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
-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남용,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



Ⅲ

국정과제 실천계획

1

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

국정과제 91

- ✓ 생활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대상에 추가,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시행(11년 9월)으로 국민의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
 - 신분보장, 신변보호, 해고·징계 등 불이익의 취소, 자진신고자의 형사·징계책임감면을 통해 신고 활성화 및 공익침해 예방 효과
 - ※ 식품위생법, 폐기물관리법, 공정거래법 등 180개 법률 관련 공익신고 처리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운영 사례

- ◆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신고를 통해 보완시공을 완료, 교량 붕괴 위험 예방
 - ◆ 식중독균 검출로 생산 금지된 편육을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에 제조정지 및 과징금 부과
 - ◆ KTX 열차 주요부품 파손사고 신고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이익조치, 원상회복 결정
 - ◆ 소각시설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
- 민생 관련 법률을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, 위험물 안전관리 등이 아직 공익신고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
 - 자진신고자가 받은 형벌·징계책임 이외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미비
 -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

□ 추진 내용

- 공익침해 개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·단체와 협의체 운영 강화
 - ('12년) 건설안전 확보(대한건설협회) → ('13.4월) 유독물관리 강화(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), 생활안전 공익신고 공동조사·처리체계 확립(경찰청)
-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활성화
 - 건설안전, 유독물 등 국민생활 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(4월~)
 - TV·전광판 등 활용 홍보,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등 신고 편의성 제고
 - 민관협력 정책 전수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제도·사례 전파(60여개 기업 대상),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발표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 추진('13.9월 정기국회 제출)
 - 민생(식품·안전) 및 경제·사회적 약자(중소기업·영세상인, 노인·장애인) 관련법 중 공익신고·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

< 예 시 >

- ◆ 학교급식법 : 급식위생 강화(교과부) ◆ 자동차관리법 : 불법개조 사고예방(국토부)
- ◆ 위험물안전관리법 :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(방재청)
- ◆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: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(공정위)

※ 국민 안전 관련 분야에 인허가·감독,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침해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여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 등 추진

-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형벌·징계 등에 대한 책임감면율 이에 준하는 불리한 행정처분(과징금·세금부과 등)에도 확대

□ 추진 로드맵

시기	추진계획
'13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활안전관련 신고 공동조사처리를 위한 간담회(4월) ·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토론회(4월) · 생활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(4월~) · 법 개정안 입법예고·부처협의(~7월), 법제심사(~8월), 국회제출 예정(9월) ·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구현(10월) · 민간부문 공익침해 및 신고자 보호 인식도조사(12월), 우수사례발표(12월)
'14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도 및 신고편의성 지속 제고('14~)

2

깨끗한 정부를 위한 「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

국정과제 138 관련

- ✓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탁·알선 및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「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지속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사건은 정부 신뢰도 저하의 주요인
 - 우리사회의 연고·온정주의로 인한 알선·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



- 공직자가 금품·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「형법」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의 사각지대 발생
-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잠재성을 지닌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필요
 - ※ 최근 언론은 고위직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이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증대
-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
 - ※ 미국, 캐나다,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

□ 법안 핵심내용

- (부정청탁 금지)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,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
 - 공직자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·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
- (금품수수 금지) 공직자가 직무관련성·대가성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수수·요구·약속하는 행위 금지
 -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 마련
 - 다만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의 처벌과 관련 관계부처간 이견 존재
- (이해충돌 방지)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,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의 제한,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
 -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·기피·회피, 사적 이해관계 신고·관리

□ 추진 로드맵

시기	추진계획
'13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계부처 협의,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(4월) · 법제처 법령안 심사(4월) · 차관회의, 국무회의 상정(5월) ·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(6월)
'14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행령 제정 및 제도 보완(연중)

IV

주요정책 추진계획

1

현장중심 권익구제 활성화

◇ 국민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, 정부는 국민의 민원을 끝까지 해결해야 함 ('13.3.18. 청와대 회의 등 대통령 강조사항)

1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

○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민원 '10대 분야 30개 항목'을 선정, 개별 '카드화'하여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 해소(4월~)

- (관리방법) · 최우선 처리 : 현지조사 원칙, 30일내 처리,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노력
- 민원조정회의 운영 : 민원 소관부처와 권익위가 참여하여 이행 확보

< 민생고충 10대 분야, 30개 항목 >

▷ 기초생활 보장	: 기초수급자 보호,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등
▷ 취약계층 생활보호	: 에너지 빈곤층, 영세체납자 생계비 압류 구제 등
▷ 가계부담 덜기	: 맞벌이 부부 보육, 교육비·등록금 등
▷ 영세기업·소상공인 보호	: 영세기업, 소상공인, 골목상권 보호 등
▷ 경제약자 재활	: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,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등
▷ 비정규직 사회보험	: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
▷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	: 출입국, 체류, 국적 취득, 언어 등
▷ 중증질환자 보호	: 진료비, 간병비, 생계비 등
▷ 긴급재난 구호	: 재해 이재민 보호, 농작물 피해, 주택복구 등
▷ 국방보훈	: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 구제 등

○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(연중)

-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

※ 산간 도서 등 미방문지역 중심 운영(36개 지역)

-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운영

※ 다문화 가정, 영세상공인 등 14회



-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해묵은 민원, 다수인 민원,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조정 확대(연중)
 -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현장 조정으로 해결 원칙(연 40건 목표)
 - 합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

② 「특별민원팀」 운영을 통해 반복·고질민원 중점 해결

- 반복·고질민원 등은 특별민원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해결(연중),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상황 카드화 관리(분기별)
 - ※ 중재 가능한 대안 제시,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의 기법 활용
- 각급기관에 반복민원 등 대응 매뉴얼 보급, 모범 처리사례 전파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및 민원에 의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(연중)
 - ※ '11.7월 출범이후 고질민원 28건 처리, '13년 20건 처리 목표

③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 구축

-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단계별 배려(연중)



- 지방거주민의 소명기회 보장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 시행('13년 10회)
- 소외계층·사회적 약자 및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은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심판의 공정성·신뢰성 제고
- 심판 청구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,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
 - ※ 집행정지 인용률 : '11년 8.2% → '12년 11.8% → '13년 2월 16.5%
- 소상공인 등 기업활동과 연관된 행정심판 인용 사례를 분석하여,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쟁송 예방(연중)

2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

- ◇ 거창한 정책보다는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것이 중요
('13.1.7. 인수위 전체회의 대통령 강조사항)

□ 추진 배경

- 사회적 약자, 일반서민, 중소·벤처기업 등을 위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'손톱 밑 가시'를 뽑아 따뜻한 성장, 나누는 복지 기반 구축
- 온·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, 민원해소,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회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가시 뽑기로 문제의 재발 방지

※ 인수위 '국민행복제안센터'에 접수된 31,308건은 분석하여 제도개선 연계(권익위 종합 관리)

□ 추진 방안 (국정과제인 정부 3.0과 연계하여 추진)



- (내용) · 권익위의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에 국민행복 제안센터 설치
· 행복제안 정보의 주기적 분석 및 관계기관 제공
· 민생 관련 고충민원, 행정심판 집중 관리
· 필요시 제도개선(법령·규제정비) 및 전자공공토론
·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의 만족도 평가(주부, 학생, 회사원 등)
- (추진일정) 범정부적 관리체계 구축(4월, 국무조정실·안전행정부 협의),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(5월~),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통한 정책 피드백(7월~)

- ◇ 정부 3.0은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는 것임 ('13.1.29. 인수위 토론회 대통령 강조사항)

①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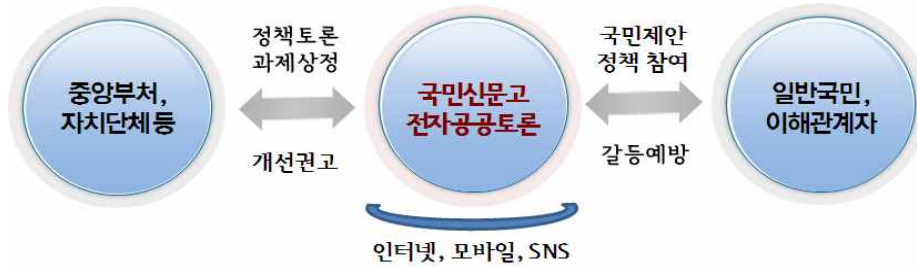
-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주요현안, 민원 등 국민의 소리(일평균 1만건)를 분석하여 정책 품질 제고(연중)



- 국정과제, 민발민원 등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각 부처의 정책개선에 활용, 국민과의 정책 소통 증대(연중)
- ※ 학교폭력,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등 이슈 28건, 민발민원 24건 분석·제공('12년)
- 정부부처가 민원분석 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국민 소통과 정책 발전의 선순환적 체계 구축
- ※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('13.4월), 민원정보 공동활용('13.11월)

② 「전자공공토론」으로 소통형 디지털 미래정부 구현

-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민·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접점의 실시간·쌍방향 토론의 장 운영(연중)
- 포털, SNS의 현안 이슈를 안전으로 자동연계, 대화방에서 실시간 소통



- 대규모 국책사업(예: 5천억 이상)은 의무적 안전상정, 결과는 미디어 공론화
- ※ 기존 행정예고뿐 아니라 행정정보 전반을 공개하여 정책수립단계별 참여 촉진

○ 세대별·계층별 관심 이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(4월~)



- 안전, 일자리, 교육, 노후 등 현안 이슈선정, 정책수립시 반영
- 정책 소관부처의 안전 상정 증대 등 참여 활성화 유도
- ※ 정부업무평가시 지표에 반영 검토

③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

-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운영
 - (국내) 인터넷 화상, SNS 및 수화상담,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
 - (국외) 해외거주 교민,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 창구(영어, 중국어, 태국어 등 11개 언어)를 점차 확대
- 분산·운영*되어 국민불편 및 국가재정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 콜센터 통합(4~6월)
 - * 110(민원), 129(복지) 등 26개 기관에서 29개의 콜번호 사용 중
 - 우선 수도권 소재 10개 기관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이전(6월) 하고, 단계적으로 원스톱 콜서비스 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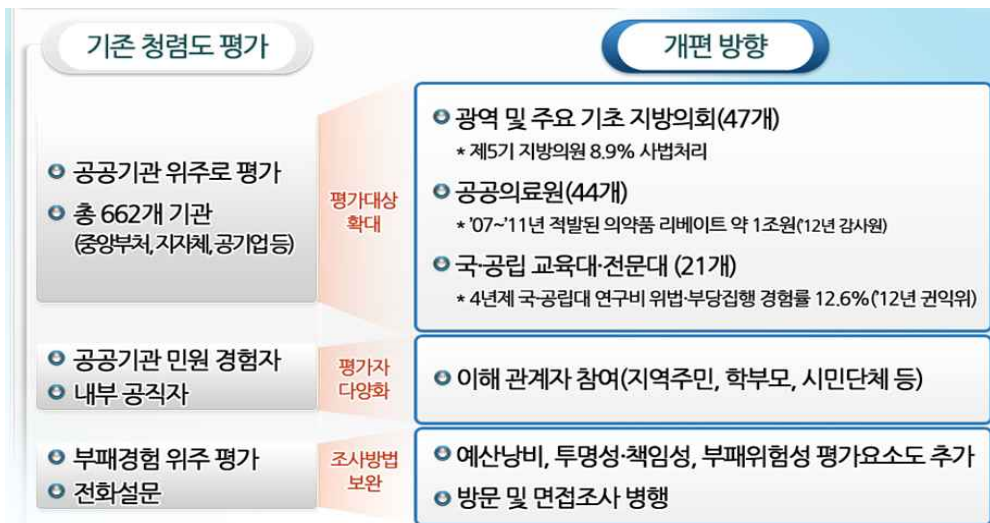
4

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실현

- ◇ 99%의 공무원이 깨끗하더라도 1%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됨 ('13.1.30. 인수위 토론회 대통령 강조사항)

1] 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

-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투명성 · 책임성 제고



- 행동강령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**맞춤형으로 전환**(행위기준 구체화 등)하여 **공직부패 차단**(11월)
- 권익위 · 전문가 · 기관 합동으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기관별 청렴 역량 진단,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「**청렴성공 프로젝트**」 추진(연중)
 - ※ 청렴도 하위기관인 외교부, 제주도,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기관 대상
- 청렴연수원의 **확대·발전**을 통한 전국민 청렴의식 확산(연중)
 - 기관별, 직급별 부패수준·사안에 따라 **차별화된 교육·콘텐츠** 개발
 - ※ 부패통계, 기관별 청렴도,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활용하여 취약분야 개선 유도
 - 공직자외에 **학생, 기업, 일반국민, 외국 공무원** 등 전문교육 확대(연 3천명→연 1만명까지 확대 추진) 및 청렴연구기관화 추진

② 국민생활과 밀접한 '민생분야 부패' 집중 개선

○ 복지, 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집중점검(4월~)

- 사회복지사업,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부패 원인 해결(4대 분야, 11개 과제)

< '13년 집중 점검분야 >

- ◆ 민생복지 : 사회복지사업, 어린이집 운영, 인허가 사업 등
- ◆ 연구개발 : 과학기술 연구개발비,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등
- ◆ 교 육 : 지자체 교육이전경비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
- ◆ 지방행정 :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 예산운영,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등

※ 실태조사('13.4~5월), 개선안 마련(6~7월), 관계부처 협의·권고(10월)

○ 최근 5년간의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·주택, 금융, 각종 공공 계약 보조금 분야 중심 실태조사 및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(5월~)

- ◆ 건설·건축 : 최근 5년간 국민·공무원 인식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
- ◆ 금 용 : 전관예우 관행, 임직원 공금횡령 등 비리 발생
- ◆ 공공보조금 : 복지예산('13년 97.4조원)의 통제장치 미흡으로 낭비 요인

③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

○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청렴운동 확산 지원(연중)

- 청렴실천 민간참여 프로그램(20여개, 340백만원) 추진
- 경제 5단체 등과 협력,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지원

○ 반부패 국제라운드에 능동적 참여·대응(연중)

- UN 반부패협약,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협약의 능동적 이행
- 개도국에 UN, IMF, 세계은행을 통한 청렴도평가,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우수 정책·제도의 기술원조(ODA) 확대

○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경험 공유 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(10월, 한국행정학회와 권익위가 공동 주관)

5

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

◇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,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설계 필요 ('13.1.1. 대통령 신년사)

1 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

○ 개선대상 :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시급 분야, 민생직결 분야 문제점 개선

분 야	수혜자	개선과제 (예시)
생활안심 분야	일반국민	아동안전(장난감, 놀이시설, 학교시설) 시설안전(가스·전기·소방 점검) 자동차,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등
소외계층 보호	일반국민 중소기업 소상공인	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누수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불법하도급,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
미래성장 지원	대학생 청년	과도한 입학전형료, 기성회비 방만집행 유사·중복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등

○ 개선절차 :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이해 관계자 참여, 대안모색



- **개선방법** ·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 실시간 반영
현장 실태조사,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
- 국민행복모니터링단(가칭)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
(주부, 회사원, 학생 등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)

② 국민행복,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

- **개선대상** : 정부, 공공기관,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, 법·제도

분 야	개선과제 (예시)
민생 부조리	협회비 등 각종 위탁사무 비용 부당징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악용한 입학 등 공적기금 부실심사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수혜 곤란 등
관리감독 사각지대	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로 불필요한 소송 반복 공공기관의 재출자·출연기관 남설 예산외로 운영되는 각종 수익금의 방만집행 등
민간위탁 분야	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수수 행위 전문 자격사의 비리행위에 대한 통제 미흡 등

- **개선방법** · 제도 전반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
제·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, 상·하위 법령 연계 개선
- 예산 절감액 제시, 부패통계 분석 등 개선현황 모니터링

- ① 불명확한 규정정비, ② 인허가 재량남용 통제, ③ 처벌규정 실효성 확보,
④ 심의위원회 개편, 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“관계부처 협업” 으로 추진

V

부처간 협업과제

1

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

□ 추진 배경

- 공공갈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면 사회적 대립과 반목 심화, 정책전반·국가적 갈등으로 전이
-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권익위가 사회적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해 제3자적 입장에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조정 역할 확대 필요

□ 추진 내용

- 현재 갈등의 소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안을 해결하고, 국무조정실은 「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에 의해 평가 관리
- 정부 갈등현안과 권익위의 집단민원이 겹치는 복합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·권익위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협업 추진
 - ※ '12년에는 '호남 KTX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건설' 갈등 등 4건 협업으로 성공 해결, 13년에도 국무조정실과 갈등조정 협업 확대 추진 예정

□ 협업 필요사항

-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한 '갈등조정협의회' 운영 확대(4월~)
 - ※ 정부 갈등현안 중 권익위에 제기된 집단갈등민원, 다수부처 관련 복합 갈등사안 등에 대해서는 공동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해결원칙 정립
- 공공갈등 관리규정에 부처 관련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정참여 근거 명시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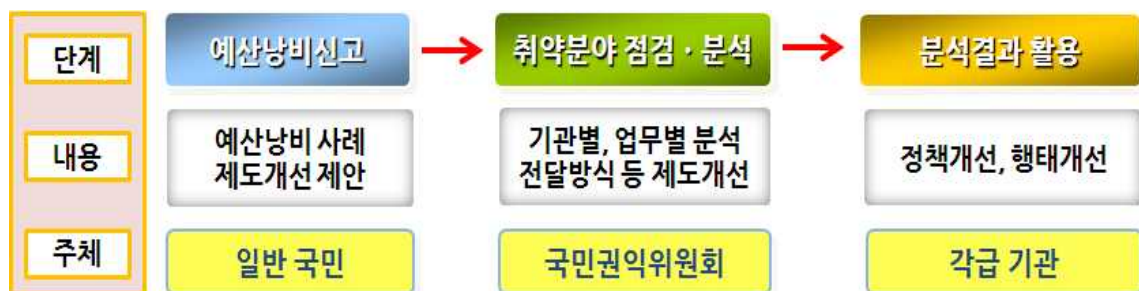
복지지원금 등 예산낭비 관행 개선

□ 추진 배경

- 일선 복지 공무원에 과도한 업무 부과(깔때기 현상), 전달체계 점검 미흡 등으로 예산횡령, 복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등 지속 발생
-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피드백 강화 필요

□ 추진 내용

- 예산낭비신고, 복지 지원금 등 취약분야 점검 등을 통해 낭비유형(기관별, 업무별)을 체계적으로 분석
- 예산낭비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, 관계기관간 공동 활용
- 소액 포상금제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확대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신고 활성화



□ 협업 필요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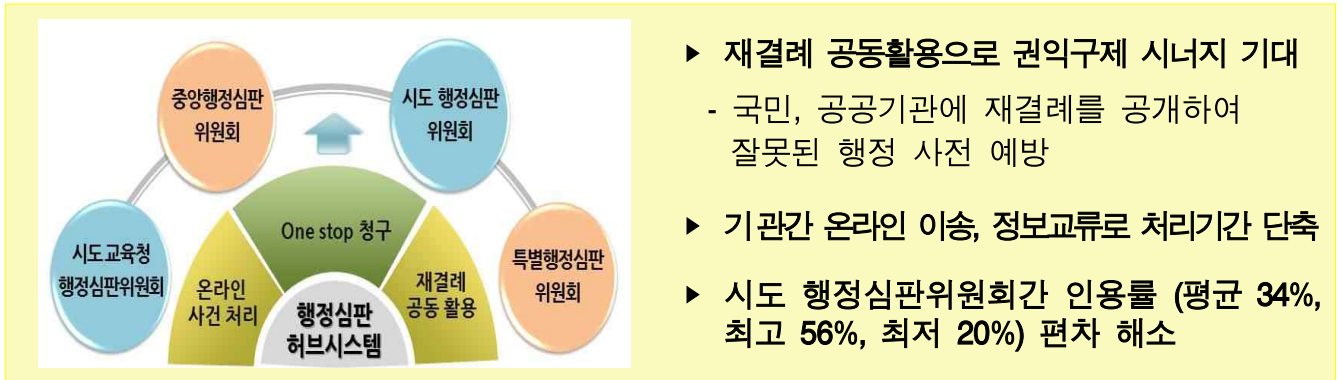
- 예산낭비 요소 제거를 위한 관계기관간 공동 활용체계 구축(~6월)

3

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권익구제

□ 추진 배경

- 누구나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서비스 체계 구축



□ 추진 내용

- '12년 전략계획 수립 완료, '13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추진
 - 6개 기관(권익위, 서울, 부산, 제주, 경기교육청, 서울교정청 등) 대상 1단계 시스템 구축(4~12월)
- * '13년 관련 예산 38억원, '16년 총 50개 기관 구축완료 예정(150억원 소요)

□ 협업 필요사항

- '13년 1단계 시스템 구축 대상 6개 기관과 실무추진단 구성·운영
 -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각 기관의 재결 정보 등을 DB화하여 공유
- 안전행정부, 정보화진흥원,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시스템 구축단계별 진행현황 공동점검 및 개선사항 보완